

2019년도 중구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19.11.4.부터 11.15.까지 (10일간) 중구를 대상으로 2016년 6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87건(본 처분 62건, 현지처분 2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에 발굴한 수범사례 2건에 대하여는 산하 전 기관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감사결과 내역

구분	처분현황(건)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본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추징· 환수 등	환급· 감액 등
계	87	62	25	87	49	34	4	1,046,500	1,034,586	11,914

2019년도 중구 종합감사 결과

【 수 범 사 례 】

수범사례 1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추진

□ 추진배경

-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사고 발생 시 다수사상자 발생 우려가 높아 신속한 대응 필요
- 영종국제도시 인구증가율은 급속하게 증가(5년간 31%증가) 하고 있으나 대형병원이 부재하여 주민의 응급상황 불안감 증가 및 관련민원 반복 제기됨.

□ 현 황

- 사업기간 : 2018년 ~ 유치 시
- 사업위치 : 영종국제도시 지역 내
- 사업내용 : 응급실을 갖춘 대형 종합병원 유치
- 사업예산 : 29,800천원

□ 수범내용

-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중구 T/F팀을 구성하여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협조 대응체계 구축
- 지역주민 공론화를 위해 각종 매스컴을 통해 종합병원 유치 필요성을 홍보하고 시민유치단과 함께 1만2천여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종합병원 유치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
- 효율적인 종합병원 유치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단체, 의료법인과의 간담회를 실시

□ 주요 추진활동

○ (대응체계 구축)

- 실무 T/F팀(5개반 11명)을 구성하여 실무회의를 통해 업무방향 수립
- 응급의료취약지 선정 자료 제출 및 보건복지부 면담 실시
- 영종국제도시·용유지역 응급의료취약 연구용역 실시(2019. 4월 ~ 6월)
- 인천시 구청장 협의회 공론화 안건제출 및 통반장을 통한 서명운동 전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관 종합병원 유치 6자 협의체 개최

○ (필요성 공론화)

- 시장 연두방문 간담회, 의사 간담회 실시 : 총5회 간담회 실시
- 시민유치단과 협력하여 서명운동 전개(2018.12~2019.1) : 12천여명 서명
- 종합병원 유치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2019.9.26.) : 100여명 참석

□ 기대효과

- 응급의료취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의 의료환경, 자원 등을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당위성 확보
- 종합병원유치방안 마련 포럼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영종국제도시의 응급의료체계구축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함.

수범사례 2

CCTV 설치를 통한 임시보관장 관리

□ 현 황

○ 임시보관장(건설폐기물) 설치승인 현황

연번	수집운반 업체명	용적(m ³)	허용 보관량(톤)	최초 승인일자
1	◇◇(주)	700	1,050	2001.02.22.
2	○○(주)	700	1,050	2002.03.23.
3	□□(주)	700	1,050	2000.11.11.
4	△△(주)	700	1,050	2001.11.22.
5	(주)○○○	300	450	2009.09.29.

□ 수범내용

- CCTV 설치·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으로 임시보관장 내 방치 폐기물 발생 예방
- 효율적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를 통해 구민이 공감하는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 기대효과

- 환경취약 사업장의 경각심 고취와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
- 신속한 민원대응과 환경피해 최소화로 구민이 공감하는 체감 환경 개선
-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로 환경행정 능률제고
- 구청과 기업의 환경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선진 환경행정 추진

2019년도 중구 종합감사 결과

【 처 분 요 구 사 항 】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 범위)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같은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에서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제2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9조(협약체결 등)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를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시 시장 등의 승인 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였고, 협약 체결 후 공증을 하지 않았으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 [주의] ①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절차에 맞게 추진하시고,
- ② 민간위탁 업무추진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체육시설 직권폐업 처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이 기간 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중구에서는 미운영 체육시설업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직권폐업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018. 6. 15.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018. 6. 14.부터 6. 20.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2018. 6. 29. “체육시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일제 조사 결과 보고”를 통하여 조사결과 및 직권폐업 대상을 보고한 후 2018. 7. 2.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 후 2018. 8. 13. 직권폐업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폐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야 함에도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처리하였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 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고지)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체육시설업 일제 조사 결과 직권폐업 대상 54건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처분의 사전 통지를 처음부터 공시송달 하였고,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행정처분 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온나라 문서시스템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 ■■실 A는 2016. 1. 1.부터 2019. 8. 5.까지 전자문서시스템 업무 실무책임자였으며, B는 2015.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중구 ■■실에서 업무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동 규정 제2조제2호에서 기록물은 “처리부서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하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전자문서의 경우 ■■실에서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은 “△△사업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중구 ■■실에서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담당자였던 A는 2018.3.9. 시스템 백업 결과를 점검 중 일부 데이터가 백업 중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2018.3.9. 13:10경 사업단에게 오류부분에 대하여 조치요청을 하였고, 2018.3.9. 14:56경 사업단 직원으로부터 조치완료 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 후 2018.3.24.(토), 09시경 청사 본청 정전으로 인한 온나라 문서시스템 서버의

전원을 차단 후 13시경 재가동하였고, 이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서 3.9 장애시점부터 3.24일까지의 중구 전부서의 온나라 문서가 손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온나라 문서시스템 AP서버에 존재하고 있던 문서파일을 복구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전자문서의 관리카드는 모두 삭제되었고, 일부 문서의 경우 붙임문서가 복구가 되지 않은 등 온나라 문서시스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자문서시스템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目目과

내 용

1. 서류전형 부적정

인천광역시 중구(目目과)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하여 5개 분야 각 1명씩 총 5명의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채용코자 시험공고하면서 응시자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경력증명서 등 각종 서류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중 외국어로 제출한 서류(학위증명서 등)의 경우 번역공증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공고하였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중구(目目과)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중 “ㄱ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의 응시자 A가 제출한 외국어로 된 학위증명서를 번역공증서 없이 그대로 접수하였으며, 함께 제출한 경력증명서 2개중 (주)●●의 경력증명서는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후 서류전형 합격여부를 판정하여야 하여야 하나 이를 보완 내지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1차 서류전형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채용공고문상의 자격기준은 실무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함에도 직인이 누락되어 효력이 없는 경력증명서상의 실무경력 2년 4월을 인정, 총 4년 1월로 산정하여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사실이 있다.

2.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인천광역시 중구는 공무원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채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면접위원 등 시험위원에 대하여 승낙서를 징구하는 등 철저한 시험관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면접시험은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최종 결정단계로서 면접위원은 누가보더라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바, 이에 인천광역시 중구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시험위원)제4항 규정에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조(정의)제1호 규정에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특혜의 배제) 조항을 통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규정에서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중구(구)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 중 “ㄴ분야 일반임기제 7급” 채용과정 중 '18.03.20.(화) 실시한 면접시험에서 응시자 B(당시 ㄷ분야 임기제공무원)와 중구 ■■■실에서 약 2년 1개월을 함께 근무하였던 C(▼▼과장)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해당 채용시험에서 B가 최종 합격한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이 2015. 8. 24.부터 2019. 2. 17.까지 중구 ■■■과에서 채용업무 실무 책임자였던 D와 2017. 1. 2.부터 2018. 7. 4.까지 중구 ■■■과에서 채용업무 감독 책임자였던 E는 임기제공무원 채용당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비위행위가 있거나 고의성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류전형과 면접위원 선정 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면접위원 선정관련 임기제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재공고, 응시자 자격기준 및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등 채용업무 전반에 걸쳐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채용업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행사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협약에 의한 행사 위탁에 관한 사항

인건비 및 수당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비 및 행사홍보비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제2항에 따르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의 성질별 분류

일반운영비 -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공은 [표]와 같이 구분되어 있고, 편성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공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행사실비보상공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행사 출연자의 사례금 등 출연료를 행사운영비 내에 모두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행사운영비 예산 집행 시 직접 집행하거나 「지방계약법령」 등이 정한 절차에 따른 민간위탁을 하지 아니하고 ○○원과 협약을 체결, 위탁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용역의 도급은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나, ◇◇과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또한, 용역(행사)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용역이 완료되고 검사를 마친 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예산 전액을 행사 착수 이전에 보조금 형식으로 교부하는 등 「지방계약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특히, 2016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시 “○○원 주관 축제(행사)성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축제(행사)를 추진할 경우 구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직접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대행사를 선정하고 회계부서를 통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추진하고, 법적 근거 없이 공동

주관사를 선정, 사업비를 재교부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보조사업자가 제3자와 계약할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구에 계약의 대행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〇〇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보조금 형식으로 교부하였고, 계약 체결도 〇〇원 자체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또한, 〇〇원에서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 확인 결과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따르지 않았고, 행사 출연자 대가 지급 시 본인이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하거나 청구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비용인 계약이행보증보험료를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2.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교부조건)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중구에서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 보조금 교부조건을 정하여 교부하고 있고, 보조금 교부조건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교부조건이 정하고 있는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또는 감액 조치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교부조건이 정하고 있는 자부담 비율 30%를 준수하지 않고, 23~27%만 부담하였음에도 보조금 환수 또는 감액 조치 없이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평가대상)부터 제23조(평가결과 인센티브·패널티 적용)를 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는 축제를 대상으로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사항, 참가자 반응 등, 2. 운영·행사진행 전반,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 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 용역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패널티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현재 중구에서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반영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공개의 의무화)에 따르면 구청장은 축제 개최 후 축제 운영 예·결산 현황 및 축제수입금액,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을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야외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중구 야외공연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1. 야외공연장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제5조(사용허가)에 따르면 야외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례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서 구청장은 사용을 신청한 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그 사용을 허가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용허가 신청)제2항에 따르면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집회신고가 필요한 행사는 집회신고필증, 회원 및 공연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사용허가 통보서(「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사용허가 사항을 통보하면서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통보서를 교부하지 않고 휴대폰 문자를 통하여 통보하였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사용료 납기일자를 공연일 이후로 정하여 고지, 신청자들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공연장을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사용료 체납자들에게 공문을 통한 납부독촉을 소홀히 하였으며, 체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야외공연장 사용을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건 ○○원의 체납이 발생하였다.

2. 야외공연장 ○·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구에서는 관내 야외공연장 3개소(ㄱ공연장, ㄴ홀, ㄷ공연장)에 대한 ○ 및 ㅈ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야외공연장 ○·ㅈ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9년 야외공연장 ○·ㅈ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계약의 산출내역서 확인 결과 ㄱ장 및 ㄴ홀, ㄷ공연장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장비의 개별적인 단가를 정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과업지시서 10. 과업의 변경을 보면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는 경우와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2019. 7.부터 ㄱ공연장 ○의 고장으로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고 유지보수 또한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과업의 변경을 통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동일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①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를 통보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처리하시고, 사용료 체납액은 절차에 따라 징수하시기 바라며, 체납자들이 지속적으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체 없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세부 기준을 <별표 2>로 정하고 있으며, <별표 2>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가격 제한기준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 중구에서는 “ㄷ 리모델링 사업” 등 총 3건의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2018. 8월부터 2018.11월 사이에 3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각각 계약해지 한 바 있으며,

위 시설공사의 계약상대자 3개사에 ‘공사계약해지 통보’ 공문을 발송하면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임”을 공문내용에 포함하여 통보하였다.

따라서, 인천 중구(☉☉과)에서는 “ㄷ 리모델링 사업” 등 총 3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체 제제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부정당업체 제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 1년 2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부정당업체(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어 계약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관련법령 검토를 통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등에게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지급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내 용

1. 하도급 계약시 국민연금보험료 등 미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제81조 규정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할 때에는 국민연금보험료¹⁾ 등 하도급 계약 내역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통보받았을 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구에서는 “○ 설치공사” 등 6개 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사로부터 통보 받은 하도급 계약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총9,190천원)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선급금) 지연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18.11.8.)에 따르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시정요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중구에서는 “ㄷ공사” 등 6개 공사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기준일내에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법령에서 15일 이내 지급해야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그 결과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선급금)을 지급기준일을 최소 4일에서 최대 73일간 지연하여 하도급인에게 지급되어 불합리한 공사대금 지급관계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하도급 대금지급은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하도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 관리와 관련 담당자, 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검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에 따라 개발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춘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이하 “정기하자검사”라 한다)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이하 “하자만료검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 또는 하자검사를 위임받은 검사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공사·물품·용역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따로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구 계약부서(□□과)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하자검사 실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계획서에 따르면 ‘하자검사’는 사업부서 시설공사 담당자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하자검사를 위임받은 사업부서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하자검사 실시요청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하자검사는 실시 대상물 총2,122건 중 102건을 미실시 하였으며, 하자만료검사는 실시대상물 총466건 중 109건을 미실시 하였다.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하자검사 미실시에 따른 독촉 등 하자검사 이행 완료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지방계약법」 제20조,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정기하자검사와 하자만료검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대부시 사용자의 손해보험 가입 부적합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財政局과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등에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9호 서식> 허가 조건 제6조에는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구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후 부담한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2017.11.13.개정)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제10호 서식> 대부 조건 제6조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00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상위법과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비교

구 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제2항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제6조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	사용자가 손해보험 개별가입 또는 구가 가입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은 공유재산 대부 시 <별지 제10호 서식> 제6조에 공유재산의 사용자가 가입 또는 구가 가입 후 공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며, 사용자가 신규(갱신) 미가입 하거나 공실의 경우 화재 등의 발생 시 공유재산의 손해 발생에 따른 대처가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인에게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물품(차량)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미사용중인 이륜차를 불용처분 없이 장기간 방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본청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 물품출납원은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물품운용관은 각 실·과장, 분임물품출납원은 각 실·과 주무담당으로 물품사무관리자의 사무를 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5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제24조 규정에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사업부서의 물품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의 불용결정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물품 장부가 격별 전결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 승인 후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중구 ◆◆과는 친환경 전기이륜차(ECO-MC1 60km/h)에 대한 소요조회를 한 후 취득단가 2,959천원으로 구입하여 4개 부서에 총 6대를 보급(2006.12.26.) 하였다. 이 가운데 총 3대는 2010년과 2016년에 불용결정 후 사용 폐지되었다.

나머지 3대중 하나인 중구 ○○과 ㄱ은 잦은 고장으로 2010.12.30.까지 최종 책임보험 가입 이후 약 9년간 미사용중으로 현재 중구청 지하 2층 주차장에 보관

중이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중구 ◇◇과로 미가입자료로 통보되지 않아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내역은 없는 상태이다.

또한 ■■과 ㄴ은 잦은 고장으로 2009.12.22. 자진 사용폐지 후 불용신청은 하지 않고 중구청 흡연실 인근에 2019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약 10년간 방치하였다.

아울러 최초 ■■과의 ㄷ는 4회(2013.12월 □□소 → 2015. 5.13. ◇◇과 → 2016. 9. 5. ○○과 → 2018. 7. 1. △△과)에 걸쳐 관리부서 변경에도 불구하고 인계인수 절차가 없어 최초 ■■과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써, △△과에서 공원녹지 관리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소음에 따른 민원과 고장으로 2017. 4월 전기자전거로 대체하면서 공원에 약 2년 이상 방치하다가 2019.11월 감사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 후 ◇◇과에 불용 요청하였다.

특히 이륜차 사용 폐지없이 방치함으로써 2018. 1.19. 책임보험 가입종료에 따라 2018. 9. 6. 과태료 부과되었으나 2019.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약 1년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과태료 300천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물품의 관리부서 전환을 미이행하고 고장 또는 대체용품 사용 시 절차에 따라 보관중인 해당 이륜차를 불용처분하지도 않고 방치하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하였다.

2.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및 압류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에 따라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 제1항 제2호에는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 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 신청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구 명의의 소유차량 중 검사지연과태료 부과 건을 살펴보면 총 22건으로 최소 2일부터 최대 162일이 지연되어 중구 ◇◇과는 과태료 총 1,020천원이 부과하였다. 특히 ◇◇과의 ㄹ와 ㄱ 2대의 차량은 각 300천원씩 부과되었으나 폐차말소까지도 미납되어 중구 ◇◇과는 중구 소유 공용차량을 대체 압류하였다.

차량 검사지연과태료 부과 후 압류내역을 보면, △△소 ●●의 큰 엔진결함으로 2018. 6.18. 대체차량 구입완료 후 ◇◇과로 불용요청하면서 반납되었다. 해당 차량은 2018. 6.25.까지 정기검사 만료기간이므로 인계받은 ◇◇과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 제1항 제2호의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기간 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신청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없이 2019. 2.26. 공용차량 불용결정을 통해 2019. 2.28. 폐기처분하였다. 따라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2018. 6.26.부터 2019. 2.28.까지 검사기간이 경과되어 2019. 2.11.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300천원)되었고 미납되어 2019. 7.25. 중구 공용차량 ㄱ차량으로 대체압류되었다. 2019. 11월 감사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 완료함으로써 공용차량 관리에 소홀하였고 독촉고지 등의 체납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다.

또한 ◇◇과의 ㄷ도 엔진미션 결함으로 인한 사용이 불가능하여 불용대상물품의 일괄 처리를 위해 보관 중이었으나 정기검사 유예요청을 하지 않아 ㄱ와 마찬가지로 6개월간 지연(2018. 8.24.~2019. 2.28.) 과태료 부과(300천원)후 미납으로 압류되었다.

3. 책임보험 가입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중구 ◇◇과의 ○등 22건은 미가입일이 최소 1일에서 최대 173일로(12,000원~300,000원 과태료) 과태료 총 1,048천원이 부과됨으로써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차량관리에 소홀하였다.

4. 차량 수리내역 미작성 또는 미비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제3호 <별지 제13호 서식> 에는 차량 이력 카드에 차량 취득 관련 항목과 차량 수리내역을 기록·보존하고 차량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 □□과는 진공청소차 ㄱ등 4대에 대해 최근 4년간 연간 최소 1,368천원에서 최대 17,064천원 상당액을 집행하였으나 수리내역을 차량 이력 카드 또는 새올시스템에 기록관리 하지 않았다.

또한 중구 ■■■과 ㄷ등 총 5대의 차량은 일부 연도는 기재하였거나 기재하지 않아 차량관리에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 [시정] ①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륜차의 불용처분 등을 실시하고,
- ② 미기재된 차량정비내역을 차량관리대장에(새올행정시스템 또는 수기장부)에 기록관리 하시기 바라며,
- ③ 운행중인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의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전직원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선금지급 채권확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제조(구매 제외),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 구입비, 보험료 등의 충당을 위한 대가로서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의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른 선금의무지급률 이상 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되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미만이거나 선금 지급일이 보증 개시일로 지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선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적용)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중구에서는 ‘口 제작’ 등 7건의 선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액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 받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선금채권확보 등 선금의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및 산업안전보건비 사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6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호, 2016.3.08.)에 따라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규모, 배치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등을 설계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 등 공사계약내용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시공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감액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구에서 시행중인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 건립공사의 설계내역서 상에 가설건축물 2개동과 옥상 출입구 캐노피가 설계되어있으나 시공되어 있지 않아 2,467천원의 감액이 요구되며, ㄱ관 건립공사는 인접 부지와 고저차로 인한 안전을 고려해 아트창살웬스를 적용하였으나 출입구 5경간 구간은 인접 부지와 고저차가 없어 설치가 필요치 않아 2,027천원의 감액이 요구된다.

2.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는 안전업무를 전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별표 4>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안전 관련 학과 전공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 대학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 안전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구에서는 ㄴ 증축공사 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1회에 2,700천원씩 3회에 걸쳐 총 8,100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 건립공사 가설건축물과 옥상 출입구 캐노피 시공비 2,467천원 및 ㄸ 건립공사 아트창살웬스 설치비 2,027천원(총 4,494천원)을 감액조치하시고, ㄴ 증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 인건비 8,100천원을 추징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ㅈ 건립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계약기간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종),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 1140호) 제3장 제16조(공사기간의 조정)에 따라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중구에서 시행중인 건립공사는 2017. 9. 14. ■■■(주)와 계약하고 2017. 9. 20. 착공하여(2018. 3. 18. 준공예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관부서인 ◎◎과에서 10평을 증가하여 시공하여 달라는 요청에 의해 재설계에 따른 공사 중지 158일을 공사기간 연장하였으며, 인접대지의 붕괴된 보강토 옹벽 처리 및 흙막이 공사로 98일의 기간연장, 시공사귀책사유로 인한 옹벽 재시공으로 인한 측량실시 등으로 13일의 기간연장을 하여 총 269일의 공사기간을 연장하였다.

시공사의 귀책으로 옹벽시공 위치가 잘못되어 측량을 실시한 13일의 공사기간 연장은 관련규정 상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사계약 해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 2016. 11. 14.) 제8절 3호(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실행공정율이 계획 공정률에 비해 10%이상 지연된 경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 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연배상금의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ㄱ 설립공사를 계약한 ○○(주)는 공사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2017. 9. 20. ~ 2018. 12. 11. 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시공사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2018. 10. 4. 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공사추진 할 것을 공문 통보하였으며 2019. 4. 1.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게 되었다.

임금체불 문제로 노무자들이 현장을 점거하여 2019년 1월~3월까지 공사 추진된 사항이 없었고 2019년 4월에 건축물 골조 유로폼 철거 및 정리(공정률의 1%), 5월에 기계설비 공사, 외벽조적 공사 및 상수도 설치(공정률의 2%), 6월에 외벽조적 공사(치장줄눈) 및 창호틀 설치(공정율의 1%) 후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 추진이 없었으며 2019. 9. 23. 공사감독부서에서 공사계약 해지 및 타절준공 검사조서를 공문 송부하였으나 법률자문 및 관련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을 해지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① 공사를 장기간 중지하고 있는 시공사에 대한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여
지이 건립이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사 시공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산정하여 연장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주민세(균등분)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세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매년 8. 1.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납기를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여 부과 하게 되어 있다.

중구(□□과, ●●과)에서는 매년 8. 1. 현재 관내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업 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 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사업장연계정보 일괄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사업장폐업에 따른 폐업적용처리’로 14인에 대하여 2017년 ~ 2018년분 주민세 등 14건 1,312,5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또한, 매년 8. 1. 현재 관내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 하는 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장별로 주민세 법인 균등분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4개 법인의 지점에 대하여 2015년 ~ 2019년 법인 균등분 주민세 등 14건 3,843,75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 명세의 주민세(균등분)를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주민세(균등분) 부과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주민세(재산분)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주민세 “재산분”은 「지방세법」 제80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 1.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소 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7. 31.까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81조제3항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르면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사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는 제81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1. 주민세 “재산분” 부과에 관한 사항

중구(□□과, ○○과)에서는 매년 7. 1. 현재 관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을 두고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 등 80인에 대하여 2015년 ~ 2019년 주민세 재산분 185건 90,728,74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오염물질 배출업소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에 관한 사항

중구(□□과, ○○과)에서는 매년 7. 1. 현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시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사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임에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중과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 등 8인에 대하여 2015년 ~ 2019년 주민세 재산분 9건 35,045,4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① 과세 누락 명세의 주민세(재산분)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추징하시기 바라며,

②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기존 신고납부자 이외에 관내에 건축물 면적 330㎡초과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 및 오염물질배출업소 명단을 확보하여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주민세 재산분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 하고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중구(◇◇과)에서는 2015. 5. 12. 중구에 설립된 법인 (주)◇◇이 2018. 7. 31.자에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는 바, 해당 법인은 부동산 취득당시 대도시내 법인설립 5년 미만인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정하는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4,358,000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시 과밀억제권역 안
중과세 해당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부과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지방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 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9조제5항에서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1. 위법건축물 등 취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

중구(㉠㉠과, ㉡㉡과)에서는 위법건축물 적발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6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 3,901,89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지목변경 토지 취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

중구(㉠㉠과, ㉡㉡과)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2인에 대한 관련 취득세 등 10,913,0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3.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

중구(㉠㉠과, ㉡㉡과)에서는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산업 등 41인에 대한 관련 취득세 51,121,91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지방세 부과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수입증지 인증기 사용 수수료 일일 결산 및 금고 납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하며 같은 조례 제3조에서 “수수료는 법령 또는 해당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전자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증지로 징수할 때에는 해당 수수료의 성질상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에서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서 전자증지 수입금의 납입은 구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전자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정산을 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하여 민원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과를 비롯한 5개과, ◇◇소 및 ○○소 등 13개소에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감사기간 동안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18개 부서를 대상으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현금 수납분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확인하였다.

□□과 등 15개 부서에서는 인증기집계표 및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 결산을 실시하고 구금고에 불입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관하는 한편 일일결산에 따른 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오고 있으나, □□과, ▨▨동, ▷▷동, ◎◎동, □□동에서는 일부 결재를 누락하였으며, ▣▣동, ●●동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있고, △△과, ◆◆과, ○○소에서는 별도 일일 결산을 실시하지 않고 징수결의서에 집계표, 매출전표 및 불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일일결산에 갈음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한편, 현금으로 수납한 인증기용증지수입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수료 수입금을 징수한 경우 구금고 소재지역은 다음 날까지, 그 외의 지역은 5일안에 구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7년부터 2019년 9월말까지 각 부서에서 현금수납한 증지수입에 대하여 구 금고 납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2건 126,275천원을 1일에서 최장 103일까지 지연불입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 [개선] ① 수입증지 관리부서로 하여금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수입금 일일결산 및 구 금고 납입에 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 ② 인증기용 증지수입금 납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격월 또는 분기별)으로 일일결산 및 구 금고 납입실태를 지도·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공공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 변경 및 합병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지적공부는 토지에 대한 호적으로 토지등기부와 함께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국가공적장부로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공부와 일치시켜 각종 행정업무의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변경 여부를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토지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지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토지의 이동 현황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 지적공부를 정리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ㄷ 조성사업(1단계)” 외 15건 577필지 89,963㎡(27,213평)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 후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였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 해당 지적

소관청(중구 ■■■과, ▲▲과)에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지목변경 신청 등을 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전·답·대·임야 등의 지목이 당초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지적 소관청에서는 신청이 없으면 토지의 이동 현황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함에도 직권으로 정리하지 않아 공공부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변경된 토지이용현황과 지목이 불일치하는 등 공부 장부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공사가 완료된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지목 변경과 합병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공사업 준공(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 및 합병 신청을 하도록 직원에 대한 업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국민기초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및 제37조(신고의 의무)에 따라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는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제8조(조건부수급자)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근로능력판정 유예기간 만료일 70일 전에 행복e음에서 안내대상자를 확인,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이 만료예정일임을 통보하고 대상자는 30일 전 까지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근로능력평가의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예정자가 근로능력평가 자료를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 제출하였으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평가가 미완료된 경우에는 판정 완료일까지 근로

능력이 없는 대상자로 유효기간 연장처리 하고, 근로능력평가 자료를 유효기간 만료 30일 미만~만료일 이전 제출하였으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평가가 미완료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판정 완료일까지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로서 유효기간 연장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효기간 초과’ 대상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로 관리하여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의 사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중구(○○과)에서는 근로능력재판정 대상자 중 2명에 대해서는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일을 통보하지 않고, 19명은 8일~101일 지연통보 하였으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초과한 21명에 대하여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변동처리 하여야 하나 변동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ㄷ 경로당 건립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6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호, 2016.3.08.)에 따라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규모, 배치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경로당 및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경우 시설의 필요성, 수요분석, 주변여건, 지역주민 및 이용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선정, 이용형태에 따른 건축물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ㄷ 경로당은 2016년 2월 주민 299명의 경로당 건립 민원서가 접수되었고 지속적인 경로당 건립 희망 건의가 있어 2016. 3. 18. ㄷ에 거주중인 노인 240명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ㄸ번지 상에 대지면적 322.9㎡(98평)에 지상1층 132㎡(40평) 규모로 346,342천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2017. 1. 구청장 구민과의 대화에서 주택가에 조성된 관광지역인 ㄷ 내에 화장실이 없어 관광객들의 무단방뇨가 수시로 발생하여 악취가 심해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주민 건의가 있어 2017. 3. 15. 동일 지번에 지상2층 연면적 330㎡(100평) 규모로 1층은 공중화장실, 2층은 경로당으로 건축하고자 계획을 변경하여 947,825천원의 사업비(증 601,483천원)로 건립 추진하였다.

2017. 10. 31. 특별조정교부금 474,000천원을 교부받아 2018. 2. 27.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19. 5. 28.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9. 8. 22. (주)▷▷과 경로당 건립공사 계약체결하고 2019. 9. 9. 공사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실제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음)하려던 중 인근 주민들(32명)로부터 공중화장실을 설치 반대 민원이 접수되어 2019. 9. 26.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로당 및 공중화장실 대상지 현장 확인 결과 설치부지가 4m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시 화장실 냄새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공중화장실 설치가 부적절한 지역으로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현장조사 및 주민 여론수렴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계획한 1층 경로당(165㎡)의 설계비용은 약 19,500천원이었으나 추가된 화장실 1개 층의 설계반영(1층: 화장실, 2층: 경로당)으로 약 25,569천원이 증가한 45,069천원의 설계용역비가 소요되었으며,

화장실 설치 반대 민원으로 인해 감사일 현재까지 경로당 1층의 활용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어있는 상태이다. 또한 화장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설계 용역비 발생이 예상되며 지역주민들의 필요시설인 경로당 건립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경로당 건립에 대한 변경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설물 건립 시 현장조사 및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신기술(특허) 기술사용료 계상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3절 제한 기준과 방법에 따르면 공사에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²⁾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 전에 기술개발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하도급 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 하여야 하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체결에 따른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제4장 제한입찰 <별첨양식 1>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그런데 인천 중구(중구과)에서는 “ㄷ 정비공사” 등 14건에 반영된 특허공법(신기술)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기술사용료를 “0원”으로 체결하여 기술사용료를 설계내역에 계상하지 않은 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술사용료가 설계에 계상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보유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지원만 받아 직접 시공하거나, 신기술(특허)이 적용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기술보유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게 하는 기술보유자의 참여유형을 선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인천 중구에서 기술사용료를 설계에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 신기술(특허) 공법에 적용된 공사만큼은 특허권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되었으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신기술(특허) 공법을 설계에 반영 할 경우 기술사용료를 계상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공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도로법」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종점, 주요 통과지를 포함하여 구도를 지정·고시 하여야 하고, 제25조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제31조에 따라 관내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4조 <별표 3>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무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폭 20m 이하인 도로(도로폭 20m 이하인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 포함)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 <별표 2> 기준 재정수요액 특별항목별 측정단위를 살펴보면 도로면적의 산정기준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포장, 미포장 및 미개통 도로)면적으로 하고 있다.

【표 1】 기준재정수요액 특별항목별 측정단위

<별표 1>

측정 항목 · 측정단위표(제5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4. 지역경제비	라. 도로관리비	도로면적	천제곱미터

<별표 2>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측정단위	산정기준	표시단위
12. 도로면적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포장, 미포장 및 미개통도로) 면적	천제곱미터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에서 정하는 관내 20m이하의 도로 등에 대한 위임사무와 지방교부세 세원 발굴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등에 대한 사항과 구도 지정 및 도로 구역 결정 고시 등 관내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로 미결정(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차로 일원 등 6개소(1,962m, B=5~9.5m)는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국유재산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청에서 가입하고 있는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대상에도 누락되어 있는 등 도로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교부세원 발굴을 위하여 차로 일원 등 6개소 (L=1,962m, B=5~9.5m)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에서 정하는 법정시설로 지정(결정)하시기 바라며,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가입 시 누락되는 시설(노선)이 없도록 대상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요구·권고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회회과, ○○○과

내 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표 1, 건설심사과> 에 따라 중구(회회과, ○○○과)에서는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용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사무를 재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소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³⁾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제35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과)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감사일 현재까지 국유지 내 전주, 고압선, 통신주, 진입로 등 총 233건의 사용허가를 하였고 61,082,100원의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였다.

3)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 × 50/1,000

그러나,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당해년도 사용료 부과 이후 차기년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4건 22,493,600원을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시켰다.

2. 국유재산 실태조사 미 실시

「국유재산법」 제66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⁴⁾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개장·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하고⁵⁾,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교통부 소관 국유지 실태조사와 관련 회회과에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과에서는 2018년 9월 국·공유지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총 3,250건 중 2019년 628건, 2020년 2,123건, 2021년 499건)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내부방침을 득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2019년 628건 중 11%에 그친 69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부과 누락된 국유재산 사용료 22,493,600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원활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관리 및 차기년도 사용료 부과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기간 및 사용료 부과기간을 일원화하시기를 권고합니다.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제2항제2호러목(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및 「인천광역시 사무위임규칙」제2조 <별표 1, 건설심사과, 러목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5)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지하수관리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지하수 허가기간 연장 대상시설 관리 소홀

「지하수법」 제7조의3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준공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허가신청을 하면 유효기간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중구(㉠㉠과)에서는 허가기간 연장 대상시설 18개소 중 허가기간이 만료된 4개소에 대한 연장안내와 미 연장허가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연장 대상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지하수 허가·신고시설에 대한 준공관리 소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법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군수는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시행령 제44조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중구(㉠㉠과, ㉡㉡과)에서는 준공 신고 대상 4,629개소 중 미 준공 신고된 1,391개소의 준공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지하수 허가·신고시설 이행보증금 예치관리 소홀

「지하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지역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중구(㉠㉠과, ㉡㉡과)에서는 지하수이용허가·신고 4,629개소 중 이행보증금이 미 예치된 2,753개소에 대한 이행보증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4. 지하수 허가·신고시설 정기수질검사 미실시자에 대한 조치 미 이행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⁶⁾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은 자는

6) 음용수:2년(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같은 법 제39조제10호 및 시행령 제44조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중구(㉠㉠과, ㉡㉡과)에서는 수질검사 제외대상⁷⁾ 594개소 이외의 정기 수질검사 대상 44,035개소 중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3,136개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5. 2016년 종합감사 처분요구 미정비

2016년 중구에 대한 종합감사 시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용역(2013. 10 .1. ~ 2014. 2. 17.)결과 조사된 현황(총 4,677개소 중 이용공 2,906개소, 허공 1,746개소, 불용공 25개소)과 인허가관리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지하수개발)상의 현황 정비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 결과 이후 2017년 8월 허공⁸⁾ 및 불용공⁹⁾ 등 현장조사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1,691개소를 조사완료 하고 ○지역 795개소에 대하여 새올행정시스템상 시설관리대장을 정리하였으나 새올행정시스템 상 6,325개소(이용 4,829개소, 이용중지 1,696개소)와 비교할 때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지하수 허가기간 미 연장, 지하수 준공 미신고, 이행보증금 미 예치, 정기수질검사 미 실시자에 대하여 지하수법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7)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제10조): 생활·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민방위급수시설

8) 허공: 세울 대장에 신고는 되어 있으나 해당 번지에 지하수가 없는 경우

9) 불용공: 수량부족으로 향후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관로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와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이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하수관거 설계 시에는 시공이나 사업 준공 시 필요한 각종 검사를 필히 실시하도록 지방서에 언급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CCTV조사 등을 설계내역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도로 기반 시설물(지하구조물)에 대한 공공측량 실시 후 성과심사 성과물(준공도면)을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CCTV 검사 및 관로 보호 경고테이프 설치 소홀

중구(□□과)에서는 ㄱ 도로개선구간 외 1건을 시행하면서 관로 접합 및 경사 등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이므로 관로 내부시공 품질관리를 위하여 CCTV 검사비를 설계내역에 계상하여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함에도

설계내역에 CCTV 검사비를 계상 하지 않아 검사기록 영상을 남기지 않고 준공하였으며,

또한,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에 따르면 다른 도로 점용허가(지하매설물)사업자가 도로 굴착 시 하수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설치 공사를 할 때는 관로 상단에 경고테이프를 설치하고 되메우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ㄱ 도로개선구간 외 1건에 대하여 하수관로 보호 경고테이프 설치 없이 준공하였다.

2. 도로기반시설물(하수관로) 공공측량 소홀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설물 DB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자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에 따라 정확도가 검증된 준공도면을 기반으로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UIS) 및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 기반시설물(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을 실시하여 준공 후 30일 이내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UIS) 및 도로굴착온라인 시스템 구축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ㄴ 도로개설공사 외 4건에 대하여 도로기반 시설물(하수관로)을 설치하면서 공공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하여 향후 하수도 관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관로의 신설 및 보수·교체 등 유지관리 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낭비 원인이 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 준공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정산)’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중구(★★과)에서는 총 2건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작업일보 및 공사감독일지 확인 결과, 하수관로 비굴착 내면보수 투입인력 20명에 가슴장화 2벌씩 40벌이 적정하나, 가슴장화 80벌을 집행하는 등 과다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였고,

또한, 하수관로 비굴착 내면보수 지상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화는 투입인력 교대작업을 감안하여 10명에 10켤레가 적정하나, 안전화 29켤레를 집행하는 등 과다하게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였다.

그런데도 중구(★★과)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 청구한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함에 따라 약 4,488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과다하게 청구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88천원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라며,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의 직권으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은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기간별 과태료를 부과하여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47일을 초과한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22조제5항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등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催告)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구청장의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 42대의 건설 기계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 반납 촉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다가 감사(사전조사)기간 에 인지하여 2019년 10월 22일이 되어서야 과태료를 부과(사전통지)하는 등 건설 기계 등록번호표 반납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향후,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되어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하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반납 촉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연간단가계약 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회회과, 11과

내 용

중구 회회과, 11과에서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보안등, 조명설비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관급자재 지급 및 관리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5절 자재관리 업무’ 제156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지급자재청구가 있을 경우 품명, 규격, 수량, 사용처가 명시된 자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 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재 사용 후 그 사용내역을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재 중구 ㉠㉠과, ㉡㉡과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조명설비 보수공사(연간단가 계약)에 필요한 램프, 안정기, 점멸기 등의 관급자재를 매년 1~2억원 가량을 구입하여 별도의 전기 자재창고에 보관하면서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게 필요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이를 자재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업지시 현장을 사전 조사하여 파악된 필요 자재에 대하여 자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 후 출고하여야 함에도 자재청구서 제출 없이 작업지시 내용을 감안한 공사감독자의 임의 판단에 따라 관급자재를 출고하였으며, 시공자가 지급받은 자재에 대하여 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기록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관급자재 지급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설계변경 지연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보수대상 물량 증감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검토 보고하여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2017년 가로등 보수공사와 2018년 보안등 보수공사의 1, 2회 기성대가 지급 후 보수대상 물량 증가 및 주민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작업 등으로 인해 당초 계약된 시공물량보다 실제 시공물량이 증가되어 준공일 전에 계약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낙찰차액 사용검토 보고를 하였음에도 방침을 득한 후 즉시 설계변경을 통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작업지시만 계속 통보하다가 결국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한 후 준공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설계변경을 검토 보고하는 등 설계변경을 지연 실시하였다.

3. 준공검사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회회과, ㉠㉠과에서 시행한 10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가 공사 준공 후 제출한 준공검사원 상의 시공물량에 대하여 평소 일상점검 시 현장 확인한 사항(출장복명 없음)과 시공사의 정산내역서 및 공사 사진첩만 확인하고 준공처리하는 등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전기사업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2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만 재차 통보하였을 뿐, 1~3년 이상 개선명령을 위반한 수용가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전기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중 개선명령을 위반한 22개소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기 공급 정지 요청 등의 적정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가설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회회과, 민민과

내 용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구청장은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거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여부 등을 존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알려주어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건축물이 법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가설 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내용 및 시정내용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구에서는 존치기간이 만료 된 후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등 178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가설 건축물의 위반내용 및 시정내용 등을 기록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존치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178건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 등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장기 미착공 건축물 허가취소 및 위반건축물 조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건축법」 제11조 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착공신고)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데 중구에서는 건축허가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27건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았으며, 건축물 착공 신고 이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전 사용한 2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건축허가 후 장기 미착공중인 허가건과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차고지 미 확보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 장기임대로 최저보유 허가기준에 맞게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2016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임대기간이 만료된 74건에 대하여 차고지 임대기간 연장 또는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30일 사업 전부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1차 행정처분 후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2차 허가취소’를 하여야 함에도 2년 이상 안 내문만 재차 발송하고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다가 감사기간이 임박한 2019년 10월 11일이 되어서야 행정처분(30일 사업 전부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차고지 미 확보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향후, 차고지 임대기간이 만료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갱신 신고 독촉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고, 최종 갱신 신고 독촉 후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전부정지, 허가취소 등 적정한 행정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기존 위생자교육 미이수자 및 업소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의거 과태료 20만원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등)제1항6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 및 제3항1호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제3항2호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의 관련법령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2016년~19년까지 기존 위생자 교육 미이수자로 통보된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법령에 의한 과태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과태료 처분이 불가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영업소 위생교육 미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기존위생자 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 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처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통해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시정조치 하시고 관계공무원들에게는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 하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식품판매기영업 등의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신고업종에 맞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같은 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라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행위 발견 시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2016년~20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 기준에 의하면 시·군·구는 관할지역내 설치된 모든 자판기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 2016년~2018년까지 식품자동판매기 93개소에 대한 점검 실시 내역 확인결과 2016년도에는 11개소 점검 2017년도에는 32개소 점검, 2018년도에는 5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6~2017년도에는 계획수립은 하였으나 점검결과가 없으며 2018년도에는 점검계획도 수립하지 않는 등 식품자동판매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중구 ○○과에서도 2016년~2018년까지 식품자동판매기 83개소에 대한 점검 실시 내역 확인결과 2016년도에는 25개소 점검 2017년도에는 0개소 점검, 2018년도에는 8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7~2018년도에는 점검계획도 수립하지 않는 등 식품자동판매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식품자동판매기 점검계획을 수립하시고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자동판매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회회과, ◇◇과

내 용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제36조(시설기준)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생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시 아래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중구 회회과, ◇◇과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부적정 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 [시정] ① ◇◇과에서 이물혼입으로 2차 처분(과징금)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742만원을 환부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②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중구 ◇◇과(구 ◇◇과), ▲▲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소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①발생 및 처리 현황, ②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③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④처리 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⑤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4월 31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5-164호, 2015. 9. 3.)」 제4조에는 평가대상기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말까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는 구청장은 재정적,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2016~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7년과 2019년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8년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2018. 5. 17.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조정 계획을 11월 15일에 수립한 사실이 있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운영관리 소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①발생 및 처리 현황, ②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③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④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⑤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는 구청장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①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② 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등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5-164호, 2015. 9. 3.)」 제5조에는 구청장은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평가위원회는 구청장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4월 31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하고, 같은 지침 제8조에는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 이상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구청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2016년, 2017년, 2019년 등 3개년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발생사업장 관리 소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①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②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④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 관련)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는 위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는 7일 이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립·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208호, 2016. 7. 1.)」 제19조에는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할 때의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연 한 차례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전체 점검율이 11.86%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 [시정] 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성과평가를 하시고, 그 결과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자 신고 여부 및 발생 억제 방법, 처리방법 등 감량의무자의 이행계획 신고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시고, 직원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중구 ○○○과(구 ○○○과)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의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식품제조업·가공업,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③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⑤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는 구청장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등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는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과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시설 및 업종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에는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1】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물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2> 발췌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에는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고 점검횟수는 <별표 1>에 따라 시설 및 업종에 따라 분기, 반기, 년간으로 구분하여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 사업장 현황,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 중점점검사항 등이 포함된 연간 점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환경·위생·보건·산업 등 관계부서 간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구 ㉠㉠과(구 ㉡㉡과)는 2016, 2017, 2018년도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금지 대상사업장에 대한 연간 지도·점검계획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①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 사업장 현황,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 중점점검사항 등이 포함된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②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환경·위생·보건·산업 등 관계부서 간 관련 자료를 공유하시고, 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권 고·통 보

제 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인천광역시 ◇◇과, 인천광역시 중구 ▣▣과, ★★과

내 용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에는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1항에는 비산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3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①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③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에는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미세먼지 발생 현황

구분	PM2.5 발생비율(%)	주요 배출원
비산먼지	32.7	도로비산·건설공사 등
비도로오염원	24.1	선박·항공 등
에너지산업	15.6	발전·난방 등
도로이동오염원	11.3	화물·승용차 등
사업장	9.9	제조·생산 등
기타	6.4	생물성 연소 등

※ 2024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시 대기보전과-15228호, 2019. 8. 2.) 발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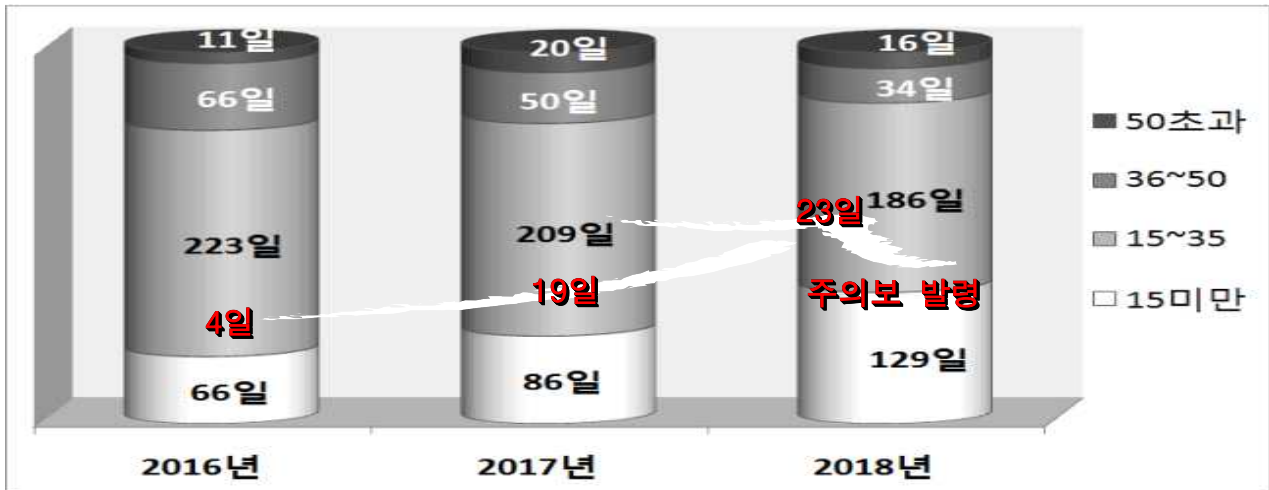
【표 2】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연도별 현황 및 저감 목표

항 목	환경 기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목 표		
							‘19	‘24	‘30
PM ₁₀ ($\mu\text{g}/\text{m}^3$)	50	49	53	49	46	40	36	34	30
PM _{2.5} ($\mu\text{g}/\text{m}^3$)	15	29	29	26	25	22	20	18	15

※ 2024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시 대기보전과-15228호, 2019. 8. 2.) 발취

미세먼지 오염원(PM_{2.5})은 비산먼지 → 선박·항공·건설기계 → 발전소 등의 순으로 도로비산·건설공사장이 3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가 15 $\mu\text{g}/\text{m}^3$ 미만의 ‘날씨가 좋은 날’의 증가(66일→ 129일)하고 있으나, 50 $\mu\text{g}/\text{m}^3$ 초과 발생일은 증가(11일 → 16일)하고 있고, 환경기준 강화로 ‘주의보’ 발령 또한 증가(4회 → 23회)하고 있다.

【표 3】 주의보 발령 및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일



국가에서는 법률 제15718호(2018. 8. 14.)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 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 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 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관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미세먼지(PM2.5)의 크기는 보통 머리카락 직경에 비해 20분의 1보다 더 작은 매우 미세한 입자로 호흡을 통해 인체로 들어가는 경우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하여 박힘으로써 폐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거나 일부는 주변 모세혈관을 타고 혈액으로 침투하여 심혈관계에 부담을 줘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관련 질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국내외 연구사례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Six cities study¹⁰⁾(1993)에는 $10\mu\text{g}/\text{m}^3$ 증가 당 총사망률 14%, 심혈관·호흡기계 사망률 19%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미국암학회¹¹⁾(1995)에서는 $10\mu\text{g}/\text{m}^3$ 증가 당 총 사망률 7%, 심혈관·호흡기계 사망률 12%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010. 9. 29. 환경부 보도자료 인용)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은 세계적으로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의 첫 번째로 '대기오염과 온난화'를 꼽고 있으며, WHO에 따르면 매년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은 700만 명에 이르고 한국인들도 미세먼지를 가장 심각한 환경 이슈로 꼽고 있다.[출처 : 중앙일보]

인체에 위해성이 높은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미세먼지(PM2.5)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 각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발생원 중 도로비산 및 건설공사장은 32.7%로 가장 높은 배출원에 해당함에 따라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이 부실하거나 부적절하여 지도·점검 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라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처분(개선명령·조치이행명령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구 ■■■과 및 ★★과에서는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지도·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개선 및

10)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미국 내 6개 도시에 거주하는 8111명을 상대로 17년간 건강 추적조사(Harvard Six Cities Study)를 진행한 적이 있으며, 미세먼지의 심혈관계질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1) 미국 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가 진행한 암 예방연구(Cancer Prevention II Study)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폐혈관계질환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치이행 등 긴급한 처분이 필요함에도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를 실시 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약 20~25일 지난 후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권고]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미세먼지의 신속한 저감을 위하여 먼지 억제시설 설치, 조치, 개선 등의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과장은

[통보] 미세먼지 발생원 중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미세먼지의 신속한 저감을 위하여 먼지 억제시설의 설치나 조치 또는 개선 등의 행정처분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각 군·구에 통보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권 고·통 보

제 목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인천광역시 ㉠㉠과, 인천광역시 중구 □□과

내 용

「악취관리법」 제3조에는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①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악취방지법」 제8조에는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중구 ㄴ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에 요청하였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중구 ㄴ 일원의 638,373.0㎡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후, 중구는 현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인 중구 ㄱ 및 ㅎ지역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지역으로 대두되어 중구 ㄱ 및 ㅎ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사업장별로 악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발적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개선의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악취저감 사업이 종료될 경우 1년 이상 민원발생 및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재요청하도록 악취저감 사업기간 동안 “유보” 결정’을 통보하였다.

중구 ㄱ 및 ㅎ지역의 악취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2016년 33건, 2017년 56건, 2018년 42건, 2019년 9월 현재 26건 등으로 157건에 이르며,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19. 9.현재까지 각 사업장에서 채취한 악취시료를 분석한 결과, 149건 중 13건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권고(행정처분)는 7건에 이르고 있다.

중구 ㄱ 및 ㅎ지역에는 대기배출시설 59개소, 폐수배출시설 44개소 등 총 103개소의 배출시설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 악취배출사업장은 8개소가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구 ㄱ 및 ㅎ지역은 매년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사업장이 존재함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하여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권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시고, 악취의 엄격한 관리와 시설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과장은

[통보] 인천광역시 중구 ㄱ지역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악취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는 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는 사업자는 대기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2항 내지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는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①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에는 가동 시작일부터 50일. (다만, 가동 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 시작일부터 70일로 한다.) ②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에는 가동 시작일부터 30일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내지 제35조에는 가동개시 신고 또는 가동개시일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8조 제6항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내지 제3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가동개시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10일 이내)에 가동개시신고(가동시작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와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단, 대기배출시설은 필요시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다)에 대한 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2016년~2019년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후 가동개시신고 수리된 사업장에 대하여 가동개시 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대기 44개소, 폐수 8개소에 대하여 기간 내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중구 ㉡과에서는 2016년~2019년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후 가동개시신고 수리된 사업장에 대하여 가동개시 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이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대기 9개소에 대하여 기간 내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아울러, 본 사항은 2016. 6월 실시한 2016년도 중구 종합감사 시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수리 후 지도·점검 소홀’로 지적되어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인·허가된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가동개시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되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정해진 기한 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세 감면자료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르면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중구(●●과)에서는 ◆◆교회가 2015. 8. 2. 및 2015. 11. 3.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였던 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에도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ㄴ번지 외 11필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 130,608,240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인 토지 소유자 ○○교회 등 2개 단체에 대하여 2015년~2019년도 재산세 등 13건 85,887,300원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고, 지방세 감면자료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 현장출장 및 감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장복명을 실시하여 향후 유예기간 내 추징하는 경우 과세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감면자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사용승인건축물 재산세 부과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당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하여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매년 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중구(◆◆과)에서는 매년 과세기준일까지 멸실,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현황이 변동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변동사항을 정리한 후 세액을 산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증축허가를 받아 2019. 4. 9.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도 재산세 등 4,153,97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된 재산세를 추징하고, 지방세 부과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유아보호법」 제41조, 제42조 따라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44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제출 기간 등을 작성하여 통지하고, 「행정절차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중구(★★과)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후 3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면서 점검일로부터 처분일까지 최대 135일까지 지연하여 처분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어린이집 행정처분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의 비지정후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¹²⁾로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집행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¹³⁾,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등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제출받아 후원금을 후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간접비 지출금지 항목 : 업무추진비, 토지 및 건물 취득비,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

13)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중구 ○○과, ◇◇과, □□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서 지출하지 못하는 업무추진비, 잡지출, 예비비 항목으로 2,399,330원을 집행하였음에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도·점검에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비지정후원금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35조에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건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수도법」 제37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는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①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②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에는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구 ㉠㉠과에서는 2016. 4.부터 2019. 11.감사일 현재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검사 후 적합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준공 검사 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① 오수처리시설 준공 검사 적합 통지 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수질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② 준공검사 후 채수기간이 도과된 시설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9조 제2항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 업무 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구 기반시설과에서는 하수관로 설치공사 업무를, 친환경조성과에서는 건설폐기물 관련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의무사용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하고, 사용 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같은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8호, 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2017.9.27.))」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으로 사용 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을 사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과에서는 2016. 3. 3. “순환골재 등 의무 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사용계획서 제출 이행 철저”라는 문서를 시행하여 각 군·구에 시달하였다.

중구 ■■과에서는 ‘ㄱ 하수관로 개·보수공사(2017. 6. 13. 착공)’와 ‘ㅇ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2018. 5. 19.착공)의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착공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작성·제출 하지 아니하였으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40% 이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중구 ☒☒과에서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는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 [시정] 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미사용과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제14호 및 제66조제2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과에서는 하수관로 설치공사 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에 관한 법령을 면밀히 검토·숙지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고,
- ③ ☒☒과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의무 대상 건설공사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 받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을 적극 독려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소하천 정비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소하천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등 미 수립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하면 소하천관리청은 소하천 등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관리청은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 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과)에서는 2013년 소하천정비(ㄱ천, ㄴ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추진하지 않았다.

또한 ㄱ천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소하천 중기계획과 소하천정비 시 수립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같이 2016년 소하천(ㄱ천) 및 ㄱ교 정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3. 공사완료에 따른 지목변경 및 합병 미이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합병 신청)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구(▷▷과)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이동 신청서(지목변경, 합병)와 준공조서, 편입용지조서 및 등기합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정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의 주된 용도인 하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 변경과 이에 따른 토지합병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 상 대·전·잡·답 등의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다.

3.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소홀

「소하천법」 제26조의2에 의하면 관리청은 소하천 제방·호안 등의 유지 상태, 제방에 설치한 수문 등 인공구조물의 관리 상태, 소하천 내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상황, 소하천 내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의 실태 등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과)에서는 2016년부터 중구 종합감사일까지 ㄷ천 및 ㄱ천 관리 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소하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 [시정] ① 소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정계획(종합계획, 중기계획)을 수립
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② 준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토지합병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소하천
시설의 관리상황 및 점용상황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③ 사업추진 시 소하천시행계획 수립 및 인허가 의제 협의, 준공협의, 준공
고시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요구·통보

제 목 도로 굴착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인천광역시 ●●과, 인천광역시 중구 □□과

내 용

도로의 구역 내에서 공작물, 기타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가 관리청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관리청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도로법시행령」 제7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로점용료 징수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며,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관련

중구(回回과)에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 도로 점용료를 부과·징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로점용 허가(지하 매설물 및 차량 진입로·출입로 등)에 따른 점용료 정기분에 대하여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하여야 함에도,

2016년 ~ 2018년 도로 점용료(지하 매설물) 정기분을 지연 부과 하였으며, 2017년 ~ 2018년 도로 점용료(차량 진입로·출입로) 정기분을 지연 부과함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일관성 없는 도로 점용료 부과 행정으로 도로 점용 허가자들의 점용료 부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2. 지하매설물 도로점용허가 관련

중구(回回과)에서는 인천광역시(●●과, □□본부, ○○청)에서 직접 또는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설한 폭 20m 초과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동 ㄴ방조제(L=7.6km), ○동 ㄷ대로(L=1.8km) 및 ○동 ㄱ도로(L=0.9km) 등 총 연장 11km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 부과에서 누락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개략 408백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징수(변상금 포함) 하지 못하였다.

3.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관련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 제11조(착공계 제출) 및 제14조(공사의 완료)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 까지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구(回回과)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2,037건 중 636건이 사업 시행자가 착공계 및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굴착·복구 공사를 시행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별도의 행정조치(도로 점용허가 조건 위반 등에 조치) 등을 하지 않아 허가 받은 내용대로 공사 시행 여부 검토를 할 수 없어 하자 발생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주요지하매설물(일반 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 미제출로 도로 점용료 정기분 부과에서 누락 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 [시정] ① 도로 점용료(지하매설물) 부과에서 누락된 408백만 원을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 ② ○지역 도로 점용(지하매설물)관련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전수 조사 용역 등을 실시하여 앞으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 ③ 도로 점용 허가 및 부과 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고, 또한 도로 점용 허가 및 징수 관련 담당직원에 대하여 직무 전문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과장은

- [통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하는 군·구에서 정기분(수시분) 부과가 지연 및 누락되고 있어 점용 허가자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공원·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르면 시장 등은 제24조 제1항(공원점용) 또는 제38조 제1항(녹지점용)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4조(점용료)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공원·녹지 점용료 부과·징수 관련

중구(○○○과)에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 공원·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중구(○○○과)에서는 ㄴ동 ○번지 근린공원 A호 등 지하에 ☒☒공사에서 설치한 전력관로 등 점용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 등에서 공원·녹지 시설물 인수 시 지하매설물을 누락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점용료 17건 159㎡에 6,439천원을 부과에서 누락하였다.

2.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세출 관련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0조 (훼손자부담금)에 따라 중구

(㉠㉠과)에서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 사고 또는 인위적인 피해에 대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2016년 1건 2,256천원, 2017년 6건 20,676천원, 2018년 4건 7,934천원, 2019년 8,514천원 징수하였다면 훼손지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보식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한 15건 중 2건만 보식하고 13건에 대하여는 보식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 [시정] 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에서 누락된 6,439천원을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 ② 중구 ㄱ지역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으로 징수한 13건에 대하여 수목 식재 적기 보식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회회과, ●●과

내 용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그 주차장에 대하여 사용검사(유효기간 3년) 및 정기검사(유효기간 2년)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규정에 의해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관련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구에서는 기계식주차장(검사 유효기간 : 2015.05.21.)등 16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기계식주차장 등 14개소에 대하여 관리인이 미 배치 되어있는 등 기계식주차장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 및 관리인 미 배치 주차장의 소유주 등에게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조치 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식주차장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를 위한 시설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따라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4%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1.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 설치 소홀

중구(▷▷과)에서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 117개소 및 노외 주차장 52개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노상주차장 26개소 43면이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ㅎ 공영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4개소 6면이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여 교통약자가 주차장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2. 주·정차 금지구역 내 공영주차장 주차 구획 설치 운영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는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며,

또한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5m 이내도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구(▷▷과)에서 노상주차장으로 운영중인 26개 55면이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 주차구획선(면)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4개소 4면이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차구획선(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3. 주차장 특별회계 용도 이외 사용 관련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르면 세출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등 외는 사용할 수 없는 데도 중구(▷▷과)에서는 중구 관리청 도로 안전지대 등에 2017년 200개, 2018년 485개, 2019년 1,030개의 시선유도봉(450mm~750mm) 설치비 28백만원을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 [시정] ①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 등 관련 규정 미준수 및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 구획 설치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선하시기 바라며,
- ② 주차장 특별회계 용도 이외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농지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새올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신청인)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그 세대원을 확인하고, 농지 원부와 기 발급한 현황을 입력·관리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청면적과 세대원이 소유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이상인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중구 ■■과에서는 농지취득증명 발급업무를 하면서 신청자 2명에게 소유상한 면적 1천㎡를 초과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하는 등 농지관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①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부적정하게 발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지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② 농지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대별로 소유상한 면적 1,000㎡를 초과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부당하게 발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2018년도 친환경식품분야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농산물 선도유지를 통한 상품성 제고 및 저온저장에 따른 수요안정(출하시기 조절 등)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을 시비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저온저장고는 각 농가별로 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사업성과가 부실하거나 부진할 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중구 ○○과에서는 2018년도 농산물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추진 하면서 지원된 농가 별로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미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농산물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식품분야 주요 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의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 할 수 있으며,

「농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구 ◆◆과에서는 일시 사용한 농지에 대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2019.11.8.)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아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기간이 만료된 농지에 대해 즉각 원상복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불법어업 과징금 단속기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수산업법」 제91조(과징금 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과징금의 용도) 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 단속하여 행정처분 의뢰한 14건에 대하여 과징금 37,200천원을 징수하였으나, 단속기관에 총액에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 11,160천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어업 과징금 보조금 지급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불법어업 과징금 징수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어항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어항관리조례에 따른 안전점검·사용상황조사 및 기록·유지 소홀

「중구 어항관리 조례」 제8조(어항시설의 점검) 및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와 파손 여부 및 어항시설 관리·사용사항을 현지 조사하고 어항시설 점검부 및 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관리중인 7개 어항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분기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어항시설 점검부 및 관리부 기록·유지에도 소홀히 하였다.

2.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 처리 부적정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24조(사용기간의 연장)에 따라 어항관리청은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사용·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되기 30일전까지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받은자는 사용·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5건에 대하여 기간이 종료되기 30일전까지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받은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고, 어항시설 사용·점용 연장허가를 기간 만료 후에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허가를 처리하는 등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어항관리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어선 대체허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허가어선의 대체 등)에 따르면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선의 노후 등으로 해당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어선의 폐기 등의 조치사항을 취하거나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치계획을 제출할 경우 허가권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어선의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어선대체 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선대체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연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어업허가 업무처리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기관 행정처분 및 휴·폐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위반업소 행정처분 관련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제2항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한다. 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시정명령이 병과 처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구 ○○소에서는 의료기관 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2. 의료기관 휴·폐업 관리 부적정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휴업 및 폐업 신고하려는 의료기관은 휴업 및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휴업·폐업일자,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정산에 대한 내용 등을 게시해야 하고 입원환자에 대해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하는 등 의료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휴·폐업 처리를 하여야 한다.(2017. 6.21일부터 시행)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관련)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절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및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확인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환자 전원조치 여부 및 휴·폐업 게시 안내문 여부 등 확인
 - 가. 폐업 또는 휴업 게시 예정일자
 - 나.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다.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라.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그러나 중구(回回소)에서는 2018. 10월부터 2019. 6월까지 총7개소의 의료기관에 대한 휴·폐업신고를 처리하면서 「의료법」 제40조제4항제3호에 대한 철저한 확인 없이 폐업신고를 처리하는 등 행정처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행정처분의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고 환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관계기관 등에 철저히 홍보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관계공무원들에게는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또한,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소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483개소를 관리하면서 응급장비를 설치한 기관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중앙응급의료포탈 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83개소 중 40개소에 대해서는 점검기간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있는 등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 점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 관련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중앙응급 의료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점검이행 사항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보건소(보건지소) 의료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소, ㉠㉠과

내 용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에는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중구 국제도시보건과에서는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중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일반의료 폐기물을 배출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써 보건지소·진료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의료폐기물의 종류

의료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성상	보관기일
위해의료 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15일
	병리계 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15일
	손상성 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등	30일
	일반의료 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액 세트 등	15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 종류) 및 <별표 2> 발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는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사용개시 연월일 란에는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폐기물 보관기일은 [표 1]과 같으며,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기준은 아래[표 2]와 같다.

【표 2】 의료폐기물 보관시설 세부기준

1.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3.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5.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6.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및 <별표 5> 발취

중구 ▷▷소 및 ㉠㉠과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위의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배출량 등을 직접 입력하여 배출량의 확정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력관리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게 맡겨 입력하게 하여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감사기간 현장 확인 결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사용개시 연월일’란에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기록하지 않거나 보관기일이 지난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의료폐기물 보관시설 세부기준”에 따른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 [시정] ① 의료폐기물 배출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배출량 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입력하여 배출량을 확정하도록 하시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사용개시 연월일을 기록하여 보관기일이 초과된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② ▷▷소에서는 의료폐기물의 “보관시설 세부기준”에 따라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시고, 직원의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공원·녹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르면 시장 등은 제24조 제1항(공원점용) 또는 제38조 제1항(녹지점용)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4조(점용료)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공원·녹지 점용료 부과·징수 관련

경제자유구역청(○○과)에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 공원·녹지의 점용료(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부과·징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과)에서는 8공원 내 도로(L= 4km)에 ☒☒공사에서 2006년 이전에 설치(지하 매설물)한 전력관로(175mm*3열/점용면적 2,565㎡)를 2017. 1. 1. ◇◇에서 공원 시설물 인계 시 누락하여 3년간 공원 점용료 148백만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에서 누락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 [시정] 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에서 누락된 148,108천원을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 ② 중구 ○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부과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전수 조사와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